

I. 법원 안내

1. 법원 소개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법권의 독립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재판공개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급제도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은 과거에는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급으로, 그리고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었으나, 1998. 3. 1. 부터는 1심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3심제가 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1998. 3. 1. 특허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가 채택되었습니다.

2. 법원이 하는 일

가. 재판

1)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분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유무에 따라 원·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의 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70.1%에 이르고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중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입니다.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입찰이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찰 절차와 비슷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하여 불성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더욱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 수사 및 기소절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수행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구속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영장을 발부합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야 시작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이 배심 또는 피해자 등이 사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검사는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판절차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등 낭독과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할 때 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체포가 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하여

야 합니다. 심문은 판사의 주재 하에 이루어지고, 피의자 및 변호인은 피의사실 및 구속사유 등에 관한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판사는 그와 같은 심문결과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구속요건의 존부와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체포 · 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 체포 · 구속된 피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체포 ·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 조건이 보증금 납부일 경우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 · 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유 · 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합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 · 상고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증거신청시기의 제한, 증인신청사유제한 등 1심 재판절차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합니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가사재판

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고,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경찰서장, 검사, 법원 등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소년을 발견한 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를 직접 통고(통고는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시작해 달라는 뜻의 통지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의 범행,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처우 결정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자나 변호사 이외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 아동복지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원 등에 위탁 또는 송치하는 처분 등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고,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으로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가정보호재판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요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6) 행정재판

행정재판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행정소송의 예로는 각종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보험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행정소송의 심리는 민사소송의 심리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현재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재판

▶ 법령의 위헌심사

행정부 등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고,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습니다.

▶ 선거재판

선거재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소송은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소송은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최종심으로, 구·시·군의 장 선거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재판합니다.

▶ 특허재판

특허재판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특허사건에 관한 분쟁은 맨 먼저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다루어지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법원이 그 취소소송을 1심법원으로서 관할하게 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군사재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나.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그 지원의 등기과나 등기계도 하나의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사무 외에 법인등기사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장과 구가 있는 시에서의 구청장이 행하고, 법원이 그 업무를 감독합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또는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신고에는 판사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공탁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